

#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26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		
강원도민일보	21	"		"	.	...	2	
江原日報	11	500					3	
江原日報					[1/2]		4	
江原日報					[2/2]		5	
江原日報	14	[ ]					6	
江原日報	21	[ ]		( )			6	
江原日報	21	[ ]		( )			6	
강원도민일보	11	[ ]		( )			6	
강원도민일보	11	[ ]		( )			6	
						?[1/2]	7	
						?[2/2]	8	
강원도민일보	02	'		'			9	
							9	
				가			10	
							11	
		[ ]		.		.	...	12
대한경제							...	13
				2				14
江原日報	01					...		14
				가				15
						...	가	16
江原日報	11	"				"		17
						...		18
G1방송		~		"		"		19
강원도민일보	01	~						20
江原日報	02			2		...	'0 '	20

江原日報	01		... 2	21
江原日報	02		... 2	21
江原日報	19	[ ]	3	22
江原日報	19	[ ]	,	23
강원도민일보	19	[ ]	' ' 가	24
강원도민일보	19	[ ]		25

원주문화원-강원도의회, 문화원 활성화 간담회



▲ 원주문화원(원장 이상현)은 25일 문화원에서 류인출·박길선·박윤미·원제용·전찬성·하석균 등 원주권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문화원이 각종 역사문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원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주문화원(원장 이상현)은 25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류인출·박길선·박윤미·원제용·전찬성·하석균 등 원주권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도의원들은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8개)', '동악제례 봉행', '관동무 활성화', '휴게공간(카페) 조성' 등 올해 중점 추진할 문화원 사업들을 공유했다.

특히 문화원은 이들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 필요성을 도의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전통문화 계승·보존, 시민 전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사업 취지에 비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문화원의 설명이다.

또 문화원은 도민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동악제례가 도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초헌관으로 초청하는데 도의원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원들은 "제기된 사안 모두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26 ( )  
21



원주문화원과 원주지역 도의원 간담회가  
25일 문화원에서 열렸다.

### “동악제례 지사 초헌관 초청 필요”

#### 원주문화원·지역 도의원 간담회

도민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원주 동악제례에도지사를 초헌관으로 초청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원주문화원(원장 이상현)은 25일 문화원에서 류인출·박길선·박윤미·원제용·전찬성·하석균 등 원주권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동악제례가 도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해달라”며 이처럼 요청했다.

원주문화원과 도의원들은 이날 동악제례 봉행을 비롯해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8개)’, ‘관동무활성화’ 등 올해 중점 추진할 문화원 사업들을 공유했다. 문화원은 각종 역사문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관심과 도비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제기된 사안 모두 심도있게 검토해 현실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권혜민

# 500년역사 동약제 도 대표제례 만든다

**【원주】속보=**국내 현존하는 유교식 최고(古) 산신제인 ‘동약제’를 도내 대표 제례 중 하나로 확대(본보 지난 19일자 11면 보도)하는 데에 원주지역 도의원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주문화원과 도의원들은 25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문화원은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 ‘동약제례 봉행’, ‘관동무 활성화’, ‘휴게공간 조성’ 등 올해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원은 올해 도와 원주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기 위해 사적 제439호 강원감영에 LED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이

**원주문화원-도의원 간담회 지역문화 활성화 논의 강원감영 야간 경관 조성·원도심 전통축제 등 계획**



◇원주문화원(원장:이상현)과 박길선·박윤미·하석균·원제용·류인출·전찬성 도의원은 25일 간담회를 가졌다.

를 거점으로 인근 문화시설, 전통시장을 연계, 원도심 전통축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500여년 역사의 동약제례를 도 대표 제례로 확대하고 2020년 복원된 관동무를 전승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예산 확보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원주지역 행사로 열리던 동약제를 올해부터 도 차원 행사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으고 도지사를 초헌관으로 초청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도의원들은 “제기된 사안 모두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타당한 만큼 심도 있게 검토, 도비 확보를 통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원주문화원장은 “도의원들과 협력해 강원감영과 동약제, 관동무 관련 사업을 도내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2023 01 26 ( )

# 江原日報

## 춘천 강북 지역에 인문계고교 한 곳도 없어

도청 강북추진위원회 25일 신경호 교육감 간담회  
27일 오전 10시 30분 김진태 지사와 간담회 예정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길)는 25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신경호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인문계고교 설립 등을 건의했다.

춘천 속보=강북지역 주민들이 옛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에 인문계 고교(일반고)를 설립(분보 지난 12일자 10면 보도)해 줄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는 25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신경호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영길 추진위원장, 박찬흥 강원도의원, 김용갑 춘천시의원, 신순남 신사우동장 등은 춘천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강북지역에는 인문계고교가 없다며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인문계 고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길)는 25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신경호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인문계고교 설립 등을 건의했다.

또 도청과의 도교육청 동내면 고은리 동반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두 국제학교 설립 등도 요구했다. 특히 추후 도교육청이 주차공간 부족과 건물 노후로 이전이 필요하다면 신사우동 강원도유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수교육원에 대해서는 강북지역 유치로 통한 교육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수 급감 등으로 추가 학교 신설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국제적인 규모의 특성화 학교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학교 설립 문제는 강원도지사가 승인하는 사안이라 도에서 결정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인준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이전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강북지역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김진태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임기내 소양8교 조기 건설, 북춘천역 신설, 제2공병여단 이전,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동내면 고은리를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로 선정한 이유를 비롯해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 선정위원별 점수표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용갑 시의원은 도지사 등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추후 후속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江原日報

2023 01 26 ( )  
14

●새얼굴●



최재석 북평고총동문회장

최재석(64) 북평고총동문회장은 “학교공간 혁신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 동해 출신. 강원대 농학과를 졸업. 1985년 삼척MBC 기자로 입사해 보도부장, 방송제작국장, MBC강원영동 보도국장 등을 역임. 도의원(동해1·국민의힘)으로 활동 중. 【동해】

# 江原日報

2023 01 26 ( )  
21

◇박호균강원도의원(강릉)



은 26일 오전 11시 박월동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박월동 합동도배례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1 26 ( )  
21

병산동민회 총회



◇김용래강원도의원(강릉)

은 26일 오전 10시 병산동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병산동민회 총회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 01 26 ( )  
11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강릉시 박

월동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박월동 합동도배례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26 ( )  
11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강릉시 병

산동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병산동민회 총회에 참석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의회 모습은?

홍한표

오는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지방의회의 모습과 역할,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속에서  
풀뿌리 자치 참여를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11대 강원도의회 의원은 49명.

하지만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가 정해지다보니,

정선,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인제의  
의원 정수는 단 1명입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소외되는 현상을  
도의회 내에서도 겪는 겁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법을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내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집권 형태의 자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가 고루 담기도록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석 / 강원도 홍보협력팀장  
"도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에서도 최소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인데  
특별자치도 1호 제주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제주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통합했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습니다.

2023 01 25 ( )

**MBC 강원영동**

그런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없어  
주민 자치단체, 자생단체마저  
사라져버리는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선언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  
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18개 시·군 기초의회가  
체계없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우선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광석 / 강원도 홍보협력팀장  
"세밀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특  
별법 개정안에는 도와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  
'자치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실현하는  
핵심 의제입니다.

자치분권을 순행할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흥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그래픽 : 양민호)

# 강원도민일보

## ‘환경 규제 완화’ 시급한 강원, 권한 내주기 싫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 2. 환경 부문 권한이양 논쟁 불가피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내용은 환경규제 완화다. 강원 영북권 최대속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에 추진됐으나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2년 반 만에 겨우 마무리됐다. 이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한 것은 환경 규제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기 때문으로 이는 곧 환경 부문 중점 규제에 가로막힌 강원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충논리 조정, 합리적 조율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견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전략

환경, 특자도 지역발전 ‘열쇠’

### 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요구

#### 환경부 내부 찬반 의견 엇갈려

이지만 환경부 내에선 독자적 권한을 내주는 것에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관련한 특례를 비롯해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특례,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등도 담겼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만㎡ 이하 면적을 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도립공원 지정·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댐 건설관리 특례와 관련해선 지역에서 운영 중인 댐의 발전판매 수익금은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목적댐의 경우 수익금, 사 용료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 역시 댐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했다.

반도체 공장 유치의 전제조건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질오염총량관리

의 개발부하량 추가 반영,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특례를 줬다.

환경 부문 특례는 환경부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이양하는 것이어서 특례 확정까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환경부 공식사회는 강원도의 규제완화 요구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환경부 공무원의 강원특별자치도 파견 및 정원수 조정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이양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 부문 특례 핵심은 환경영향평가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마혀 사업 추진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첫 술에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국회, 환경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춘천MBC

## 강원도, 구제역 예방 돼지·염소 일제검사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의 유입 방지와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석달 동안

모든 돼지 농장과 염소 전업 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32,737마리에 대해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소 98%, 돼지 92%,

염소 91%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일제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백신 보강 접종과 확인 검사,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화길

2023 01 25 ( )

KBS 춘천

## 강원도, 올해 착한가격업소 재정인센티브 확대



강원도가 올해 착한가격업소 재정 인센티브를 기존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품목별로는 업소 환경개선비와 물품 구입 등에 최대 200만 원, 전기와 가스·하수도 등 공공 요금에 50만 원입니다.

강원도는 또, 현재 39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60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군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보람



# 강원도 '미취업 여성, 구직활동 지원'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 요약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차 대상자 900명 모집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기존 수혜자 재참여 확대 추진

**2023** 취업 성공을 위한 최상의 디딤돌!  
**강원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023.1.25. [수] ~ 2.15. [수]

**강원도 미취업 여성 900명**에게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애 1회 지원  
 구직지원(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모집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1993.1.26~1993.1.25.)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교육비, 교통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  
**환청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한 생중시 연속 3개월 후 50만원 현금 지원

**지원방식**  
 온라인 포인트 배정  
 온라인 복지몰  
 오프라인 오프라인 체크카드 사용 후 발급방식

**2023년 가구월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월)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245,735	2,073,893	2,663,890	3,240,578	3,798,413	4,335,789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수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13개 시군별 연락처**

춘천시 춘천시청 계동 1동 033-290-1188	속초시 속초시청 교육체육지원과 033-639-2952	원주시 원주시청 행정지원과 033-950-2519
고성군 고성군청 033-492-9994 / 0328	속초시(영양면) 033-632-9994	원주시(영동면) 033-950-1122
인제군 인제군청 033-797-5794	삼척시 삼척시청 인사지원과 033-470-4302	영월군 영월군청 행정지원과 033-492-4000
원주지역센터 033-707-4415-4	양양군 양양군청 033-201-4800	횡성군 횡성군청 인사지원과 033-492-5000 / 5014
영월시 영월시청 인사지원과 033-540-2198	홍천군 홍천군청 인사지원과 039-430-2143	영양군 영양군청 인사지원과 033-492-2198
강릉시 강릉시청 033-4388-7121~2	홍천군 홍천군청 인사지원과 039-430-2198	영양군 강릉군청 인사지원과 033-492-2198
영월군 영월군청 인사지원과 033-540-2198	횡성군 횡성군청 인사지원과 039-430-2198	고령군 고령군청 인사지원과 033-598-3902
속초시속초시청 033-596-4077	영동면(영동면) 033-595-1121	양양군 양양군청 인사지원과 033-492-1121
태백시 태백시청 인사지원과 033-580-2112/2073	영동면(영동면) 인사지원과 033-595-2198	양양군(양양면) 033-492-2800~3

강원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홍보물.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차 대상자 90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구직활동지원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기준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며 참여신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강원도는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는 통계에 주목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수혜자도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 참여는 지역사회 경제 촉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원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 01 25 ( )

## [강원도] 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 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강병만 기자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1. 26.(목) 오후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오늘 협의회에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하여 강원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강원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GTX 원주·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주~철원 철도 건설? 동서고속도로(영월~삼척) 양방향 동시 착공?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 연장? 접경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 사통팔달 강원시대 발전을 선도할 국토교통 핵심과제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도는 동서6축 완성을 위하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영월~삼척 구간 조기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원남부권 고속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양방향 동시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건의하였다.

또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가능한 수준으로의 재정비(조정)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낙후·거점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2021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을 정부가 잘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철도와 도로망 부분에 있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강병만 기자

**대한경제**

**건협 강원도회, 도지사 및 교육감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및 지역건설사 인프라사업 참여 확대방안 논의



[대한경제=봉승권 기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해를 맞아 업계의 현안과 기관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릴레이 간담회에는 오인철 회장을 비롯, 원홍상, 한상준, 장명진 부회장(단)과 김영수 감사 등이 참여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먼저 강원도교육청에서 신 교육감을 만나 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시설 발전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강원도회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교육시설 공사 발주 시 충분한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보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품질관리자 검직허용 등 기술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적정화 △관급자재 물품구매 관행 개선 △기계설비공사 통합발주 등도 건의했다.

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생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회는 이어 김 지사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2023 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업계의 지원을 약속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강원도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공동도급의 권한을 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는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함이다.

또 강원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SOC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노후시설들의 시설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 파급력이 큰 건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사는 “최근 181여개의 특례 규정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이를 통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권한이 이양되면 낙후지역 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프라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도 최대한으로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2023 01 25 ( )

MBC 강원영동

## 강원도 근해어선 2개 업종 감척 신청접수

김형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 구조 구정을 위해 강원도에서 올해 근해어선 감척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근해채낚기와 근해통발 등 2개 업종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척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8개 업종, 39척의 근해어선 감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5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감척사업은 2013년부터 정부 직권으로 감척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어선들의 어업 강도가 강해지면서 감척 사업에도 수산자원량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 01 26 ( )

江原日報

01

## 오색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착공 마지막 단계 돌입

도 투자심사 앞서 착수  
연내 완료시 내년 착공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지방비 예산 투입 근거가 될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된다. 환경협회가 다음 달 말 완료(본부 지난 4일자 1면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곧장 사업 계획을 종합 검토·평가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착공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강원도는 투자심사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과 경제성(B/C), 재무성·정책성 등을 종합 평가·분석하게 된다. 행안부와 강원도는 2월 말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 바로 심사 등에 착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타당성 조사

와 투자심사를 모두 마치는 데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 도는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책정한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8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인상 등의 영향을 받게 됐다. 현재 기준 총 사업비는 900억~1,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당초 300억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행정·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재원으로 모두 충당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재원 분담은 '8(양양군)대2(강원도)'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는 올 하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연내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만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 및 운영이 가능하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끝청 3.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하부정류장 및 산책로, 중간지주 6개가 건설된다. 최기영기자

## 도내 수소차 충전 가격 줄인상

배연환

최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도내 수소 차량의 충전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수소 차량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전 가격마저 올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지역 수소충전소 두 곳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기존의 킬로그램당 8천8백 원에서  
9천4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척에는 수소 생산 시설이 있어  
그나마 인상폭이 적은 편입니다.

[배연환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등  
일반 충전소들은 수소 충전 인상폭이 커  
수소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춘천과 원주,  
속초 충전소를 포함해  
민간 충전소의 킬로그램당 충전 요금은  
9천9백 원에서 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은 물론  
지난해 수소 공급량이 줄며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수소 충전 가격까지 인상돼 불만입니다.

황기식/수소자동차 운전자  
"그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도내 수소 충전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8백 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와 민간 업체들은  
수소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LNG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수소 충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형환/강원테크노파크 팀장  
"인상을 하게 된 주 원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더지고  
수소 충전 가격까지 오르며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 강원도 올 설 연휴 화재 소폭 감소...구급 출동은 증가



강원도소방본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는 올 설 명절 기간(1월 20~25일)에 화재는 소폭 감소했으나, 구급 출동은 증가했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에 화재 출동은 총 46건(재산 피해 규모 1억572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건이 줄었으나, 구급 출동은 189건이 증가한 1172건(857명 이송)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출동은 182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50건 줄었으나, 예방 경계, 민원 등으로 인한 기타 출동 건수(74건)는 전년(69건)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설 연휴 기간 중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안내와 의료 지도 등은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83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또한 179건을 차지했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설 명절 기간 1만1413명의 인원과 783대의 소방 장비를 동원해 특별경계근무를 진행했다.

이동학 도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설 연휴 기간 중 대형 화재는 물론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江原日報

## “횡성 군비행기 추락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피해대책위 등 집회

**【횡성】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공군 경공격기 추락 사고(본보 2022년 12월27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제8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며 공군의 무성의한 대처를 규탄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원주군용(곡예)비행기소음피해대책위, 남촌발전연대 등 주민 30여명은 25일 지난달 26일 발생한 공군 KA-1경공격기 추락 사고 현장인 횡성읍 반곡리에서 집회를 갖고 공군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블랙이글스 해체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경공격기 사고에 추락지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공군의 대응과 사후 처리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남겨 주민 불안과 분노가 야기되고 있

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기종 기체는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가 끝날 때까지 비행이 금지되지만 이번에는 사고 당일과 다음 날에도 사고기종이·착륙이 이뤄져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과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국방과 무관한 곡예비행 중단,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 즉각 해체, 주민과의 약속 이행, 청소년 학습권과 주민 생존권, 행복추구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재경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공동대표는 “소음과 경공격기 추락 사고 등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직접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안일한 대응, 대책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했다. 유학렬기자



# 도심 속 흉물, 장기방치건물...헛도는 정비 사업

[KBS 강릉] [앵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짓다 만 건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층짜리 백화점을 지으려던 원주 영동코아건물입니다.

공정률이 90%를 넘긴 상태에서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건물 곳곳이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유리창은 곳곳이 깨졌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정비 대상 장기 방치 건축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감정가와 철거 비용 등 추가 투입 비용이 80억 원이 넘어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정비 대상지로 선정한 사업장 38곳 가운데 실제로 정비가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원주시의회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미옥/원주시의회 의원 : "30년 이상 흘러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주택조성 기금법을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를 담당했던 기관이 한국토지공사, LH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실태 조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현/원주시 건축과장 : "한국부동산원이나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치 건축물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322곳.

이 가운데 46곳이 강원도에 몰려 있어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G1방송

#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적 접근 필요"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앵커]  
강원도 주요 거점 도시를 잇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속도가 느린 구간이 있는데요.  
강원 남부권 속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입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속속 개통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해, 오는 2032년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영월을 가기 위해선 고속도로를 타다 국도 38호선으로 빠져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면, 영월과 삼척 구간은 속도가 더딥니다.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화 I N T ▶  
"제천~삼척간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삼척이나 태백이나 정선이나 영월 사람들을 정부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조기착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지난해 9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던 기존 논리에서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와 사업별 특수성 등을 추가했습니다.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이제는 이런 정책 전환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낙후된 폐광지역 이미지를 버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지역의 이미지를 좀 전환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영월~삼척 구간의 건설되면, 고용유발 7만 5천 명과 생산유발 효과도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흥천 철도 노선협의 표류, 예타 신청 좌초 우려

3월 사타결과 발표 후 예타 신청  
양평군 중간정차역 추가 요구

흥천군 협의 요청 불구 진행 불발  
경기도와 지방비 분담비율 이견

속보=용문~흥천 철도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흥천군과 양평군 등 지자체간 노선협의(본지 2022년 8월 8일자 1면 등)가 지지부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 용문~흥천 철도의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타 신청에 앞서 해결해야 할 노선협의가 표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선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3월에 용문~흥천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2개 철도 사업을 선정,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예타 신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용문~흥천 철도는 현재 5개 사업 중에서도 경제성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진단, 협회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흥천군과 양평군 등 지자체

가 노선을 두고 이점을 보여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엔 예타 조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균형발전추진 등을 내세워 예타사업 선정작업에 전면 뛰어들었으나 일정 수준의 경제성 및 사업성 확보 없이 예타 대상 선정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고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선 강원도와 경기도, 흥천군과 양평군 등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비율과 최최노선에 대한 협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최적 노선으로 용문~청운~양덕원~흥천 등 4개역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중간정차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흥천군은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양평군에 노선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협의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양평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천군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선 접점 마련이 필요하다. 양평군과의 만남을 지속 추진중"이라고 했다. 용문~흥천 철도사업 조기 착공과 관련, 강원도는 26일 도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역협의회를 갖는다.

한편 용문~흥천(34.1km) 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8537억원 규모다. 정승환

# 江原日報

## 근로자 한 달에 2명꼴 사망 ... 처벌은 '0건'

/ 중대재해법 시행 1년 / (상)수사인력 부족 사건처리 지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강원지역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도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 건설업·추락사 최다 발생=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한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사망 근로자는 모두 21명이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추락사 44% 최다  
18건 중 14건 수사 장기화  
실효성 높일 대안책 시급

한 달에 두 명꼴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4건(22%)으로 그 다음이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경도 붕괴로 작업 중이던 40대 광부 4명 숨진 것과 같은 해 10월 원주시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해 11월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양양 헬기 추락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대상이다.

◇도내 중대재해 업종별 현황(건)



중대산업재해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가 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원주와 흥천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 기소까지 평균 8개월... 수사 장기화=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한 18건 중 14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건으로 지난해 2월 발생한 쌍용씨엔이 동해공장 근로자 추락사, 춘천교육청 신축 공사장 추락사 등이다. 춘

천교육청 공사장 추락사는 재판에 넘겨져 '강원도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흥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사망 사건은 '협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수사 인력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인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 검찰에서 소요되는 수사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시행 1년이 됐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류호준기자

2023 01 26 ( )  
01

江原日報

# 안쓰고 버텼는데 ... 2배 뿔 난방비 폭탄

가스요금 인상 여파 현실화 1월 고지서 받아든 서민들 분통  
LNG값 1년새 2배 가스·열 요금 인상 도미노 ... 한파까지 겹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가스요금 인상 여파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경기 침체와 역대급 한파 속에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춘천 우두동의 36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지난 12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22년 1월 25만3,880원이던 고지액이 이달 40만2,020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해서다. 사용량은 18% 늘었는데 요금은 58% 증가했다. 김씨는 “난방을 많이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1인 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주 반곡동의 12평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김모(31)씨는 1월 난방비로 9만7,000원을 납부했다.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파에도 실내온도를 21도로 유지하며 사용

량을 30% 줄였지만 고지액은 오히려 올랐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 춘천 퇴계동에서 카페를 하는 오모(56)씨에게 이달 청구된 가스요

금은 48만원.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요금이 2배나 뛰었다. 오씨는 “지난해 겨울보다 더 춥게 지냈는데 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액수의 고지서를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며 “벌써부터 다음 달 고지서가 무섭다”고 했다.

이처럼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원인이

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가격은 MMBtu(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나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액은 567억달러(약 70조원)에 달한다. 2021년과 비교해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다. 김현아기자

2면에서 계속

2023 01 26 ( )  
02

江原日報

## 안쓰고 버텼는데... 2배 뿔 난방비 폭탄 -1면에서 계속

LNG 가격 상승은 가스·열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용·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 인상했다. 증가는 38.4%다. 주택용열요금도 지난해 3월 1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11월 89.88원으로 37.8% 올랐다. 이 가운데 한파로 인해 가정마다 가

스 사용량이 늘며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동결됐지만 LNG 수입액 증가로 한국 가스공사의 손실이 불어난 만큼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여지가 크다.

# 江原日報

2023 01 26 ( )  
19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2023년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올 6월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또한 지

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는 해이기도 하다.

2023년은 ‘월 베틀’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가 발표된 지 1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소설이 150년 넘게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 명작으로 기억되는 것은 여행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호기심과 두근거림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일주가 단 며칠 만에 가능한 현대에도 이 소설은 여전히 수많은 사

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바람이다. 여행은 또한 인생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준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2023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점차로 해제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행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망이 분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 강원포럼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 관광은 강원도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16.3%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얼마 전 한 사설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

## 강원관광 3대 약속 캠페인

에서 강원도는 3년 만에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만족도 하락의 주된 이유는 물가와 청결, 위생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민여행 조사에서도 국내여행 방문지나 자연경관 만족도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친절도나 숙박 및 물가 만족도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원도 관광이 여전히 자연경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제 단순히 자연자원과 이벤

트에만 의존하는 관광 전략은 지속가능성과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제 강원도 관광도 변해야 한다.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개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뿐

만 아니라 관광의 기본으로 돌아가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설렘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에 ‘친절’, ‘청결’, ‘안전’의 ‘강원관광 3대 약속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한다. 관광의 기본인 ‘미소’

와 ‘정성’을 통해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마음을 얻는 운동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친절과 청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스스로 강원도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2023년은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해 ‘문화관광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리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다. 이제는 강원도의 ‘맛’, ‘멋’, ‘흥’에 강원도민의 ‘미소’와 ‘정성’을 더할 때다.

江原日報

2023 01 26 ( )  
/ 19

외국인 부동산 투자,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야

강원도에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본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총 4,054건의 등기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99건에서 2019년 752건, 2020년 735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866건, 2022년 90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처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29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505건, 평창 485건, 횡성 450건, 강릉 4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춘천은 2012년

ITX 운영 이후 수도권과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는 다양한 교통 접근성이 매력으로 꼽혀 외국인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법(1998년)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외국인에게 토지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여건 향상 및 산업 기능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내 부동산 가격은 지나칠 정도로 낮아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토의 변방인 데

다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공공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을 잠식한 뒤 그동안 이 땅을 어렵

사리 지켜 온 주민들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최근 5년 도내에선 4,054건의 등기 이전 발생  
산업 기능 제고 등 위해 외국인 투자 ‘긍정적’  
지자체 차원 투자상품 개발 게을리해선 안 돼

점이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개인 단위로 이뤄져 산발적이며 소규모적으로 거래가 성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농지, 임야 등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보유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기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자원 남용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에 의한 신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합적 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경로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부동산 투자상품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26 ( )  
/ 19

### 공영주차장 '제때' 확보가 관건

-원주·강릉 생계 지장 주차난, 뒷북 땀질식 처방안돼

원주, 강릉 도심 주택가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주차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세를 보이는 원주는 관공서와 상가가 몰린 도심이나 주택가, 공단을 가리지 않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비좁은 골목길의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도입기로 했으나, 사회갈등 불씨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문막공단 근처 공영주차장 40면을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자 당장 주민과 화물차량 노동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조업체가 밀집해 화물차량 이동이 잦은데도 공영화물차고지가 없고 안전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출입제한을 두는 바람에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공단 기업 밀집지 특성상 캠핑카 주차장이 아닌 화물차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세무서 주변 역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곳입니다. 자체 주차면수는 69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 준공된 단계동행복지센

터역시 23면에 불과합니다. 민원인과 주민 불편은 물론 상가 이용에 제약이 가함으로써 인근 상경기를 침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입하려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제한된 주차면이어서 공동체 갈등과 분쟁을 수반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공공용지의 지상 지하 공간 등 다각적인 방식의 공영주차장 확보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 및 차고지는 도시 필수 공영시설입니다. 주차난은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불편이자 생계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요인입니다. 원주에서 논란이 된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 및 캠핑카와 카라반 주차공간 필요성은 진작에 생겼습니다. 생계 활동 및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 수요 예측을 통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난을 소소한 문제로 취급해 경제 및 생계 활동에 지장이 될 정도까지 방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시설 조성 사업비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첨단 기술 적용으로 확보된 공영시설은 효율적으로 쓰는 등 선제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도배례 무형문화재 등재 기대

-강릉 위촌리 합동 세배 전통 전승 바람직

450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 성산면 위촌리 '도배례(都拜禮)'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을 대동계는 강릉시에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위촌리 대동계를 설립하고 도배례 시초년을 율곡이이 선생의 1571년 서원규약을 기준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마을 합동 세배라는 소중한 전통을 후대에까지 계승하기 위한 주민들의 뜻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당국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던 위촌리 도배례는 올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설이튿날인 지난 23일 마을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최고 연장자인 97세 최종춘 촌장 등 어르신을 모시고 세배를 올렸습니다. 이날 100여명의 주민이 함께 세배를 올리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기 부촌장이 직접 작사한 '위촌리 아리랑'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촌리 주민들은 조선 중기인 1571년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지금까지 도배례를 열고 있습니다. 행사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결함이 없는 촌장 집에서 행해집니

다. 도배례는 각각 집에 세배하러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의 촌장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한번에 세배하고, 이웃 간에도 함께 세배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율곡 이이가 만든 '서원향약'에서 비롯됐으며, 1899년 계획이 중수된 대동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배례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2021년 9월 위촌리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위촌리 대동계를 설립하고 각계에 이 풍습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올해 위촌리 도배례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 용역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주거 형태의 변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부락의 문화를 잃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확산돼 이웃과의 연결고리도 약화하는 현실입니다. 지역의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연대와 마을 어른에 대한 존경과 예의 등, 기존에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위촌리 도배례는 사라져가는 전통의 의미를 품고 있는 흔치 않은 유산입니다. 도배례가 강릉과 강원도를 상징할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